



살고 싶은 농촌

우리함께 만들어요

풍요로운 농촌은 우리경제의 든든한 밑동입니다.
농촌의 뿌리가 흔들린다면 모든 국민의 행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.
아이를 키우는 정성으로 농부가 새싹을 보듬듯
소비자, 기업, 정부도 정성스럽게 손을 맞잡읍시다.
그곳에 밝은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.



희망찬 농촌 신뢰받는 농정





Contents

- 4p ● 01. 부채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
- 6p ● 02.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
- 8p ● 03.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응하여,
한우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습니다
- 10p ● 04. 농지은행을 이용하세요! 농지도 맡아주고,
연체농가에게 경영회생 기회도 드립니다
- 12p ● 05. 새로운 양정제도로 쌀농가의 소득을 보전해드립니다
- 14p ● 06. 농산물도 브랜드 시대!
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도록
도와 드리겠습니다



- 16p — 07. '안전 · 친환경 농산물' 이젠 기본입니다
- 18p — 08. 농가소득 지원을 위한 직불제! 확대하겠습니다
- 20p — 09. 복지 농촌이 펼쳐집니다
- 22p — 10. DDA · FTA 협상에서 우리 농업의 실익이
최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
- 24p — 11. 살기 좋고 찾고싶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
- 26p — 12. 경쟁력 있는 농업 · 농촌을 위해 종합대책을
보완해 나가겠습니다



1. 부채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

✦ 금리는 내리고, 지원한도는 올렸습니다.

- 2006년부터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를 농업인은 4%→3%로, 비농업인은 4~5.5%→4%로 인하 하였습니다. 또한, 사업특성상 금리를 더 낮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재해대책융자금(4%→1.5%), 농지매매자금(3%→2%), 일부 육림자금(3%→1.5%)은 추가로 인하하였습니다.



- 이번 금리 인하로 이미 대출을 받은 전체 농업인은 연간 약 400억원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됨
-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등 우수창업농에 대한 정착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1억2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.(연 3%, 5년 거치 10년 상환)
- 기존 후계농업인중 전업농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1,500명에 대해서 1인당 8천만원씩 총 1,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융자 지원합니다.
 - 연 3%, 5년 거치 10년상환, 1~2월중 시·군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



+ 부채부담을 경감하고,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한 농업경영 회생자금을 상시 지원합니다.

- 2001년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5조9천억원(28만 농가)을 3년 내지 5년 분할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.
- 2001년 지원받은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원금의 10% 이상을 당초 만료일까지 상환하면 나머지는 연리 3%로 5년간 분할 상환하고, 그 외는 3년간(금리 5%)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.
- 2001년 지원받은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이번 조치에 의해 분할 상환하지 않고, 당초 상환 기한 내에 정상 상환하는 경우 납부한 이자액(최대 1년분)의 40%를 환급받게 됩니다.

분할 상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'06년중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'06.6.30일까지, '07년중 만기도래분은 '07.6.30일까지 농·축·인삼협·산림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

'07년중 만기 도래분으로서 농업인이 희망하는 경우 '06년중 신청 및 대출도 가능

+ 재해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중 경영회생이 가능한 경우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연리 3%,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.

- 경영회생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수 희망자에게 인수 자금을 지원하여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'06년부터 자금지원대상을 현행기준의 50%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여 회생을 지원하여 드립니다.

현 행
농업용부채 2,500만원이상,
준전업농 이상의 영농규모



개 선
농업용부채 1,250만원 이상
준전업농 영농규모의 1/2이상

협동조합과 02-500-1696~9, 농지과 02-500-1672~3



2.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

✦ 2006년부터 지원대상 기준을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.

- 2006년부터 농업시설의 복구비 중 보조지원 대상을 대·소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해 대규모 농업시설 피해농가도 소규모 농가와 같이 동일하게 보조지원(35%)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농업시설 피해복구자금 융자금리는 4%→1.5%로 인하하였습니다.
-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농가의 복구비와 생계비 등 간접지원비는 하나로 통합하여, 2006년부터 동시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
✦ 가축공제는 대상 축종과 공제대상 축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

대상축종	공제대상 축사
('05년) 소, 돼지, 닭, 오리, 말, 꿩, 메추리 ('06년) 사슴, 칠면조 추가	('05년) 한우사, 돈사 ('06년) 계사 추가

✦ 농업인안전공제는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.

- 농업인 농작업 사고시 재해보상을 위한 '농작업 안전공제료'의 50%를 정부가 지원하고, 보장수준도 확대하였습니다.

사망시 보장수준
('05년) 1,500만원 → ('06년) 2,500만원

공제료 1인당 지원액
('05년) 14,050원 → ('06년) 23,070원

✦ 2001년부터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- 대상품목 : 사과, 배, 복숭아, 포도, 단감, 감귤
- 대상재해 : 태풍, 우박(특약 : 동상해, 집중호우, 과수보상)
- 보험료의 할인·할증률을 확대하여 보험금을 타지 않은 농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.

할인·할증률

('05) 40% ~ -35% → ('06) 50% ~ -50%

 농산경영과 02-500-1783~5, 협동조합과 02-500-1690





3.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응하여 한우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습니다

✦ 이번 한미 쇠고기협상은 OIE(국제수역사무국) 규정을 기초로 이루어졌으며, '도축월령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' 만 수입키로 합의하였습니다.

• 이번 협상으로 2003년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2년 넘게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이르면 3월말부터 재개될 것입니다.

✦ 한우농가와 힘을 합쳐 한우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.

• 2007년부터 음식점에서 식육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하고 2008년부터는 전국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시행하여 한우고기를 한층 더 차별화시켜 나가겠습니다.

• 한우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수브랜드를 중점 육성하고 조사료생산 확대, 부루 세라 방역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


✦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되더라도 과거에 주로 수입되던 LA갈비가 배제되고 호주나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되던 물량을 대체할 것이므로 단기간에 쇠고기 수입이 급격히 늘지 않을 것입니다.

- 2003년말 148만두였던 한육우 사육두수가 지난해말에는 182만두로 늘었습니다. 축산농가에서는 기르던 소를 일시에 출하하여 소값이 급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높은 값에 송아지를 입식하는 것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가축방역과 02-500-1936~7, 축산경영과 02-500-1902~1904





4. 농지은행을 이용하세요! 농지도 맡아주고, 연체농가에게 경영회생 기회도 드립니다

✦ 농지은행제도는 농지의 유동화 지원, 농지 수탁관리, 연체농가 경영회생지원 등을 통하여 농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- 농지 매도·매입·임대, 매물정보, 농지가격 및 거래 동향 등의 농지유동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·제공해드립니다.
(농지은행 사이트 : www.fbo.or.kr)

- 직접 농사 짓기 어려운 농지를 한국농촌공사(구 농업기반공사)에 위탁하는 경우 이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해주는 농지임대수탁관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
(수탁기간 : 5년 이상)



- 다만, 투기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나 개발예정 지역안의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

최소 수탁규모

농업진흥지역 안 1,000㎡ 미만 - 농업진흥지역 밖 1,500㎡ 미만



〈수탁 및 임대절차〉



- 연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농지매입을 통한 경영회생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.

('06.4월말부터)

-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(최장 8년)하고, 경영이 안정되면 농지를 되살수 있는 권리를 보장

* '06 사업규모 : 422억원(277ha)

〈지원절차〉



 농지과 02-500-1672~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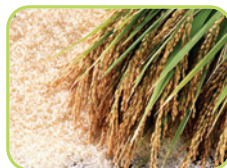
5. 새로운 양정제도로 쌀농가의 소득을 보전해드립니다

✦ 쌀협상 결과, DDA협상 이후 WTO보조금 추가 감축 등 시장개방폭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, 쌀값이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패키지로 도입하였습니다.(2005.7)

• 앞으로 농가소득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로,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는 공공비축제로, 수급조절은 산지 민간유통 활성화로 달성하는 동시에, 전업농 육성과 품질고급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.

✦ WTO 협정상 허용보조요건 충족을 위하여 공공비축규모는 600만석으로 하고, 원칙적으로 수확기에 시장가격으로 300만석을 매입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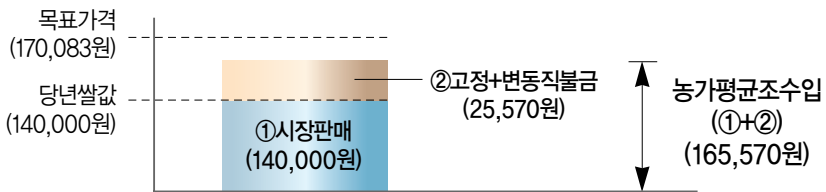
'05년에는 공공비축제 시행 첫해임에 따라 양정제도의 연착륙을 위하여 400만석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하였으며,
'06년에는 350만석을 매입할 계획입니다.



➤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비하여 목표가격(170,083원/80kg)과 수확기(10~1월) 쌀값의 차액 85%를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여 시행합니다.

- 고정직불금은 쌀의 생산 여부, 타작물 재배여부에 관계없이 2006에는 평균 70만원/ha을 농업인에게 지급(10월)할 계획입니다.
-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%에서 고정직불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쌀농가에게 지급(익년 3월)합니다.

'06년 수확기 쌀값이 14만원일 경우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쌀 80kg 한 가마당 목표가격 17만83원과의 차액 3만83원의 85%인 2만5,570원(1,559천원/ha)을 지급합니다.
 - 변동직불금은 지급한 고정직불금 평균 70만원/ha을 뺀 85만9천원/ha을 지급합니다. (1만4,095원/80kg)
 * $(170,083 - 140,000) \times 85\% - (1만,475원) = 1만,095원/80kg$



➤ 수입쌀 소비자 시판에 따른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양곡 유통의 투명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.

-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반 편성, 원산지단속 명예감시원제도 운영,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, 원산지 위반 벌칙 강화가 시행됩니다.
- 원산지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금년부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.

소득정책과 02-500-2103~4



6. 농산물도 브랜드 시대!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

✦ 시장개방 등으로 농산물 브랜드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모든 농산물은 시장에서 품질에 따라 가격이 차별화되고, 소비자 선택기준도 브랜드 위주로 바뀌게 됩니다.

생산자들과 산지유통주체들은 소비자들에게 ‘맛과 품질에 있어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인가?’ 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야 합니다. 정부도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실질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수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.

- 쌀은 RPC를 중심으로 우수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.
 - 재배규약을 설정하여 질소질 비료를 적게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쌀의 품질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함
 -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맛과 품질을 갖고 있어야 소비자들로부터 ‘브랜드’ 로 인정받을 수 있음
 -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각종 언론매체와 온라인을 통한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국민적 관심을 유도함
- 과수·채소는 시·군단위로 규모화된 브랜드 경영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공동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겠습니다.
 - 공동마케팅조직 : ('05년) 9개소 → ('06년) 15개소(누계 기준임)



- 한우 · 돼지는 브랜드 경영체 사육비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- 한우 : ('05년) 29% → ('06년) 32%, 돼지 : ('05년) 47% → ('06년) 50%

+ 우수 브랜드 경영체에는 정책자금을 집중지원해 드립니다.

- 과수 · 채소분야 : 운영자금 금리 차등 지원(1~3%)
- 경영컨설팅, 브랜드 홍보비, 운영자금 추가 지원 등

 유통정책과 02-500-1829~30, 소독관리과 02-500-2115





7. '안전·친환경 농산물' 이젠 기본입니다

✦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하여 우수농산물관리제도(GAP) 및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(Traceability)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.

- 이 제도들은 2005년도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,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.

우수농산물관리제도(GAP)

생산부터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농약·중금속·미생물 등 안정성에 위험이 되는 원인 관리

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(Traceability)

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을 관리하여 안전성 문제발생시 역추적이 가능토록함으로써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 가능

✦ 축산물은 '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(HACCP)' 를 가축사육농장, 집유장, 축산물보관·운반업소에 까지 확대 적용하겠습니다.



✦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.

- 그동안 가축분뇨액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, 전문액비유통센터를 통해 경종농가의 액비살포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.('06년 : 40억원)
 - 액비는 시·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에서 발급한 토양·작물별 시비처방서에 따라 적정량을 살포하면 작물성장에 커다란 도움이 됨.
- 시·군단위 1,000ha·1,000농가 이상이 참여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올해 착수(3개소)하고, '13년까지 50개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.
 - * 단지당 사업비 : 100억원(국비 50%, 지방비 40%, 자부담 10%)
- 유기질비료 구입시 포대당 지원하는 금액을 점차 늘려 나가겠습니다.
 - 지원 예산 : ('05년) 70만톤, 245억원 · ('06년) 120만톤, 420억원
- 농약 사용량이 많은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합성농약 대신 천적으로 해충을 방제할 수 있도록 천적구입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 - 지원규모 : ('05년) 321ha, 12억원(국비) · ('06년) 1,000ha, 37억원
 - * ha당 보조액(국비+지방비) : 560만원(자부담 포함시 700만원)
- 논 부문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단가를 대폭 높였습니다.
 - 저농약 : ('05년) 미지급 · ('06년) 21만7천원/ha(신규지원)
 - 무농약 : ('05년) 15만원/ha · ('06년) 30만7천원/ha
 - 유기 인증농가 : ('05년) 27만원/ha · ('06년) 39만2천원/ha



8. 농가소득 지원을 위한 직불제! 확대하겠습니다

✦ 농업예산 중 직불제 비중이 2005년 13.6%(1조14억원)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20% 이상 수준이 되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- 2006년부터 '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' 과 '친환경농업직불제' 는 지급단가를 인상하고, '조건불리지역직불제' 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.

〈직접직불제 현황〉

✦ 조건불리지역직불제

-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합니다.
- 지급액(ha당) : 밭·과수원 40만원, 초지 20만원 지급
- 지급요건 : 마을협약 작성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, 농지관리 의무 이행

 농지과 02-500-1673

✦ 친환경농업직불제

-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드립니다.(농가당 최고 5ha까지)
- 지급액(ha당)
 - (밭) 유기·전환기유기 79만4천원, 무농약 67만4천원, 저농약 52만4천원
 - (논) 유기·전환기유기 39만2천원, 무농약 30만7천원, 저농약 21만7천원

 친환경농업정책과 02-500-1813

✦ 친환경축산직불제

- 축산업등록 및 친환경축산 직불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친환경축산농가에게 지급합니다.
- 지급액 : 기본 프로그램 이행 - 호당 1,300만원 한도내 지급
인센티브 프로그램 이행 - 호당 200만원 한도내 추가지급
- 지급요건 : 조사료포 확보, 축분 발생량 감소, 발생 분뇨 토양환원 등

 축산정책과 02-500-1899

✦ 경관보전직불제

-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보전해드립니다.
- 지급액 : ha당 170만원
- 지급요건 : 지자체와 마을협약을 체결, 경관작물을 식재·관리

 농촌진흥과 02-500-1965

✦ 경영이양직불제

- 고령농가가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을 지원하고, 쌀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- 지급대상자 : 63세 이상 69세 이하 고령농업인,
70~72세 농업인의 경우 1회 지급조건으로 '06년까지 한시적 시행
- 지급규모 : 논 2ha까지
- 지급액 : 매도시 ha당 289만6천원(최장 8년간 매년), 임대시 : ha당 297만7천원(일시불)
- 지급요건 : 소유하고 있는 논을 한국농촌공사 또는 5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
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
- 신청기관 : 한국농촌공사(구 농업기반공사)

 농산경영과 02-500-1769





9. 복지 농촌이 펼쳐집니다

✦ 농어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‘농어업인 건강보험료’ 경감률을 2005년 40%에서 2006년부터 50%로 확대하였습니다.

• 경감률 : ('03년) 22% → ('04년) 30% → ('05년) 40% → ('06년 이후) 50%

보험료가 7만원인 경우 본인은 3만5천원(50%)만 부담,
나머지 3만5천원(50%)은 정부가 지원

✦ 농어촌 고령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‘농어업인 연금보험료’의 50%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• 1~13등급 -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50% 보조
14~45등급 - 13등급이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50% 보조

보험료가 43만200원(13등급)인 경우 본인은 21만600원(50%)만 부담,
나머지 21만600원(50%)은 정부가 지원

✦ 농어업인 대학생 자녀에게는 학자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(2월, 8월) 해 드립니다.(1인당 평균 265만원)

- 대상 : 농어촌지역(읍·면)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

✦ 농업인 자녀(만 5세 이하, 농지소유 5ha 미만)가 보육시설 이용시에는 보육료를, 보육시설 미이용시에는 일손돕기를 지원합니다.

- 보육시설 이용시 : 1인당 월 보육료 7만9천원~17만5천원, 교육비 2만8천원~15만8천원 지원
- 보육시설 미이용시 : 1인당 월 3만9,500원~8만7,500원 일손돕기 지원

✦ 2006년부터 농작업·교통·재해 등 사고가 발생한 농업인(65세미만, 3ha 미만 농가)에 대하여 최장 10일간 농촌 평균 임금의 70%를 지원하게 됩니다.(시범사업)

- 10일 지원시 : 남자 39만9천원, 여자 26만6천원

✦ 2006년부터 처음으로 65세 이상 고령단독, 편조모 및 편조부 가정 농가에 대하여 자원봉사자 등에 의한 청소, 세탁 등 가사를 지원합니다.

- 도시와 농촌의 유희인력을 연계 활용하기 위해 지역농협에 '농촌일손돕기' 신청창구를 개설하고 농협도지역본부에 인력지원단(9개소)을 구성 운영합니다.

☎ 농촌사회과 02-500-2082~7, 여성정책과 02-500-1605~09





10. DDA · FTA 협상에서 우리 농업의 실익이 최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

✦ DDA 협상, 즉 도하개발아젠다(Doha Development Agenda) 협상은 2001년 11월 중동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시작되었습니다.

- 전세계 모든 국가들은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DDA 협상에서는 이러한 관세를 낮추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. 관세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줄이자는 논의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.

✦ 흔히 UR이라고 말하는 우루과이라운드(UR) 협상은 지난 93년에 종결되었는데, 당시에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세금, 즉 관세를 선진국은 6년간 36%, 개도국은 10년간 24%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

- 현재 DDA 협상 동향을 보면 미국, 호주, 브라질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UR협상때보다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
✦ 우리 농산물이 외국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, 정부는 DDA 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을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감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
- 정부는 EU, 일본, 스위스, 노르웨이 등 우리나라처럼 농업여건이 불리한 나라들과 협력하면서 DDA 협상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.



✦ 올해는 FTA 협상도 여러나라와 추진될 예정입니다.

FTA는 자유무역협정(Free Trade Agreement)의 약자로서,
두 나라 또는 소수국가끼리 이루어지는 협상입니다.
무역을 자유롭게 확대하기 위해 국가간에 하는 약속이며,
관세를 포함한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-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칠레, 싱가포르, 유럽자유무역연합(EFTA : 4개국)과 FTA를 체결했습니다. 2006년 현재 아세안(10개국), 캐나다,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.
- 2006년에는 멕시코, 인도와의 협상이 새로 시작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미국과의 FTA 협상도 상반기 중 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농업선진국과 FTA를 체결할 때는 농업분야는 폭넓게 예외를 확보하여 개방 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 농업협상과 02-500-1734, 자유무역협정과 02-500-2032,2090,2033,2092





11. 살기 좋고 찾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

➤ 발전잠재력을 가진 농촌마을을 선정하여 살고 싶고, 찾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

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

권역당 3~5년간 70억원 범위 내 지원

- 생활권이 같은 3~5개 마을을 소권역으로 하여 마을 특성에 맞게 기초생활환경정비, 경관개선, 공동소득기반확충, 주민교육 등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

• 2006.1 현재, 76권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2006년도에 신규 30개 권역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합니다.

전원마을 조성사업

지구당 2~3년에 10~20억원 지원

- 도시민, 은퇴자 등이 농촌에 체재하거나 정주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은퇴자 마을, 체재형 주말농장 등을 조성

• 2006.1 현재, 30개 지구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, 2006년도에 신규 25개 지구를 시·군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입니다.

➤ 농촌지역개발 현장전문가(농촌마을CEO) 양성 등을 통해 주민참여형 농촌지역개발을 뒷받침하겠습니다.

•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농촌지역개발교육을 이수하고, 농촌현장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핵심리더를 선발합니다.

• 매년 7월말까지 시·군에 신청 → 농림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합니다.

✦ 농산어촌체험 활성화를 통해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겠습니다.

- 농산어촌체험마을 리더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할 사무장 채용비용을 지원합니다.
 - 마을사무장 채용 지원 : 100개 마을, 월 100만원 지원(자부담 10%)
- 도시민들이 안심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, 만일의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를 지원합니다.(마을에서 한국농촌공사에 신청·선정)
 - 농산어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 : 1회에 한하여 최대 100만원 지원(65개 마을)
- 1인1촌 전문가 자문체계 구축 : 마을 신청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서 전문가를 알선해 드립니다.
 - 2005년도 40개 마을에서 2006년도 50개 마을로 확대

✦ 농어촌민박을 표방한 불법 펜션을 규제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.

- 농어촌 민박 운영은 사전에 시장·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받도록 개선하고, 허용규모를 객실(7실 이하)기준에서 주택크기(150m²)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
종전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자는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'06.5.4일까지 해당 시장·군수에게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면 됨



12. 경쟁력있는 농업·농촌을 위해 종합대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

- ✦ 쌀협상 국회 비준 이후 정부는 농업·농촌종합대책 내용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점검·조정하여 2006년 2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

정부·농민단체간 실무협의회를 구성('05.12.9)하여
농업인과 같이 종합대책을 분야별로 점검

- ✦ 종합대책 점검의 전 과정을 정부와 농업계가 같이 만들어 나가고, 관계부처와 국회 등과의 협조 아래 추진합니다.

- 분야별 실무협의회, 간담회, 워크숍 등을 통해 농업인, 지자체, 학계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.

- 쌀협상 비준과정에서 제안된 과제 및 추가 제안과제 등 총 152개 과제를 검토 중 ('06.1월 현재)



➤ **점검작업의 진행상황 및 보완대책 수립과정 등 정책형성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.**

- 농림부 홈페이지에 [점검! 농업·농촌종합대책 '함께하는 농정']메뉴를 개설하고, 국정브리핑 '이슈·특집' 메뉴 개설 및 인터넷 대표사이트인 다음(Daum), 네이버(Naver) 등에 블로그를 운영하여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.



➤ **119조원 투·융자계획의 점검·평가 등 중장기 농업·농촌대책 점검을 위한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말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.**

☎ 구조정책과 02-500-1658~9

